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예시답안(인문 · 예체능계)

논제 I-1

제시문 [가]는 효용과 행복의 원리를 도덕적 기초로 삼는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벤담은 행복을 계량화해서 비교한 것에 반해, 밀은 행복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여 물질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요 논지로 해서 사회구성원의 행복이 최대가 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행위자 자신보다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합친 총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전체보다는 각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개인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유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을 무력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계약을 집행하는 정도에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개인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가]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제시문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47자]

2010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모범답안(인문 · 예체능계)

논제 I-2

[다]는 이해득실의 균형보다는 정의의 균형을 원리로 인간 행동을 재정립하자는 글이다. 인간은 수치화할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돈이나 강압이 아닌 정의와 애정의 힘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는 정의와 애정을 바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라]는 개인의 연대를 통한 절망 극복 의지를 담은 시이다. 사회적 갈등이나 절망적 상황이 닥쳤을 때 개인의 독립적·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타인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 [라]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문제는 전체 사회의 행복을 이익의 극대화라는 기준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익의 극대화를 중심으로 관계가 성립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차별이 생긴다. 이보다는 구성원 간의 정의와 애정의 관계맺음이 필요하다. 반면에 자율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나]는 개인이 타인과 무관한 절대적 독립체일 수는 없다는 점을 망각할 위험이 있다.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 개인은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는 시민적 책임을 지닌 관계적 존재인 것이다. [584자]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예시답안(인문 · 예체능계)

논제 II-1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사회의 생산량은 $A=3\times 9=27$, $B=2\times 4=8$, $C=2\times 1=2$ 이므로 총생산량은 이를 모두 합한 $37(27+8+2)$ 이다. 이에 사회개혁가가 등장해서 각각의 자본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생산량은 $A=3\times 5=15$, $B=2\times 5=10$, $C=5\times 1=5$ 가 되므로 이를 모두 합한 사회적 총생산량은 $30(15+10+5)$ 이 된다. 따라서 자본을 균등 분배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총생산량이 이전보다 도리어 7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사회개혁가가 도입한 자본의 균등 분할 정책은 사회적 총생산량의 감소를 낳았기 때문에 최대 행복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본 균등 분할 정책의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또한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정책에 의해 특정 개인의 자본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고 보아 정책 도입은 [나]의 입장과 상충된다. 따라서 [가], [나]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개혁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것이다. [575자]

2010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모범답안(인문 · 예체능계)

논제 II-2

이 자본 균등 배분 정책이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행되려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이 찬성하면 되므로 모두 4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세 사람이 모두 찬성하는 경우로 그 확률은 $0.2 \times 0.6 \times 0.8$ 이 되어 0.096이다. 다음으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첫 번째로 A가 반대하고 B와 C는 찬성하는 경우인데, 그 확률은 $0.8 \times 0.6 \times 0.8$ 로 0.384이다. 두 번째로 B가 반대하고 A와 C는 찬성하는 경우인데, 그 확률은 $0.2 \times 0.4 \times 0.8$ 로 0.064이다. 세 번째로 C가 반대하고 A와 B는 찬성하는 경우인데, 그 확률은 $0.2 \times 0.6 \times 0.2$ 로 0.024이다.

그러므로 4가지 경우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정책이 통과되므로 시행될 확률은 위의 4가지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모두 합한 0.568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보면 자본 균등 배분 정책이 통과되어 시행될 확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511자]